

5·18기념행사 교통통제 확대... 상인들 “상권 타격”

민주광장~금남로 등 15~18일 행사
과거 행사 대비 통제구간 5배 확대
상인회 “상인 의견 반영 안돼” 반발
행사위, 기존 4일에서 17일 하루만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예정된 기념행사의 교통통제 범위 확대를 두고 지역 상인과 행사 주최측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5·18행사위원회가 기존 400m였던 도로 통제 구간을 최대 5배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80개 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지난 12일 광주 동구청과 경찰, 소방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한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15일부터 18일까지 기존 400m 수준이었던 교통통제 구간을 최대 2km 이상으로 확대하는 교통 통제 계획을 제시했다.

행사위가 제안한 통제 구간에는 기존 5·18민주광장 앞 금남로4가역(400m) 구간을 금남로5가역까지 확대해 약 1km로 늘리는 한편, NC웨이브 총장점-한미쇼핑 사거리(790m), 하나은행 사거리-민

주광장 분수대(560m), 전일빌딩-충장로1가 방면(400m) 등도 포함돼 기존 대비 5배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총장로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총장로 일대 공실률이 이미 35%를 넘어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차량 유입 자체를 막는 조치는 지나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부 푸드트럭이 분수대 인근 400m 구간에 배치될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침체된 상권에 추가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정일성 총장로 1·2·3가 상인회장은 “교통 통제 확대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며 “상권과 주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사 추진 방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인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기념행사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행사 기간 중 교통·소방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소방당국도 우려를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위원회 계획대로 차량 통제를 하면 대규모 교통 혼잡과 응급상황 대응 미흡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사위는 13일 계획을 긴급 수정했다. 차량 통제 확대는 5월

17일 하루만 시행하고, 나머지 날짜(15·16·18일)는 기존처럼 전일빌딩 앞 일부 구간만 제한하기로 했다. 도로 통제는 1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푸드트럭 구간은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다.

행사위 관계자는 “일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었고, 상인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조정했다”며 “주변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5·18의 의미를 살리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위는 간담회 과정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1000만원 집행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구두논의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핵발전 에너지 대선후보 정책제안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반영’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설날 벌어진 참극... 아들에 징역 30년 구형

치매 노모 감당 못해 살해한 아들
변호인측 “우울증·심신미약 상태”
검찰 “어떤 범행보다 잔혹하다”

설날에 치매를 앓는 노모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그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했다. A씨가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항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한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설날 오전 0시11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

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고통에 치매 증세까지 보이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극심한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직 이후 집에 머무르며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최근 몇 년간은 항우울제 복용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한다”면서도 “2023년부터 우울증을 방지했고, 직장도 잃은 채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10대 청소년이 버린 담배꽂초,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

3월 광주 종합병원 어린이집 화재
경찰, CCTV·화재 감정 통해 입건

지난 3월31일 오후, 광주의 한 종합병원 부설 직장 어린이집에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어린이집 원생 수십 명이 낮잠을 자고 있었고, 교사들 역시 정오 이후 한창 휴식 중이던 상황이었다. 화재 순간,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뻔 했다.

화재 원인은 황당하게도 10대 청소년이 무단으로 버린 담배꽂초였다.

광산경찰에 따르면, 10대 남성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종합병원 건물 1층 주차장(필로티 구조)에서 몰래 담배를 피웠고, 그중 A군이 던진 꽂초가 재활용품 수거장에 떨어지면서 화재로 이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정,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실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군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불은 35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내에 있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대피하지 못한 병원 관계자 3명은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긴박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무엇보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판단이 대형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화재 발생 직후 교사들은 연기를 감지하고 즉각 대피 절차에 들어갔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잠들어 있던 영유아들을 한 명씩 안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이들의 대응 덕분에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큰 피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불씨 하나가 건물을 삼킬

수 있다. 담배꽂초 화재는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재난 요소”라며 “특히 어린이집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 사회적 약자가 머무는 공간에서는 그 위험성이 훨씬 커진다”고 지적한다.

실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는 연간 수백 건 이상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주거지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난다.

이번 화재는 미성년자의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화재를 유발한 A군을 포함한 청소년 4명은 모두 흡연이 금지된 미성년자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병원 기숙사 주차장에서 몰래 흡연을 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꽂초를 투기했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병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해 안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전남 여수 해상서 암컷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전남 여수 해상에서 고래 1마리가 정지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수해경은 지난 13일 오후 3시15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지망 어장 관리선 A호가 고래를 혼획했다고 밝혔다.

A호는 정지망 양망 작업 중 죽은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감별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

여수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남교육청, 교원과 학생 인권 모두 지키는 현장 지원 강화

교육활동·학생인권보호지원단 운영
교장·교감·현직 교사 등 인력 구성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교원과 인권의 균형 보호를 위한 ‘양측 체계’를 구축해 갈등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 모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전남교육청은 13일 ‘교육활동보호지원단’과 ‘학생인권보호지원단’이 정식 출범했으며, 두 조직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예방 중심의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원단은 전남 지역

교장·교감·현직 교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돼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며, 선제적 사례 분석과 대응 자문을 통해 갈등 사전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은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 자문, 맞춤형 컨설팅, 교직원 연수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학생인권보호지원단’은 학생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 인권침해 지원, 학생·학부모 인권교육 등을 운영한다.

이날 두 지원단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활동 방향과 사례 대응 방법 등을 공유했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 보급하고, 분기별 점검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제도화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호범 전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지원단 중심의 활동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존중과 공존이 살아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